

2026년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출제기준 기반 모의고사 5회

자료 성격: 출제기준형 · 2026-10-03 · 문항 수: 80 · 근거 기준일: 2026-09-15

성명		점수	/ 100
----	--	----	-------

2026-09-16 전면 교체한 자체제작 예상문제. 작성 기준일 2026-09-15. 전체 정답·현행법령·의미중복 최종
검수와 시험 관리기관 직접 원본 대조는 미완료입니다. 정답·해설은 웹에서 확인하세요. 정답과 해설은
license.3001.co.kr의 같은 제목 게시물에서 확인하세요.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

1. 공공기관이 필요한 장비를 도입하면서 수요 확인, 구매조건 설정, 공급자 선정, 계약 이행 점검을 하나의
업무 흐름으로 관리한다. 이 업무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 입찰서를 접수하는 단계만 공공조달에 해당한다.
- (2) 공공기관의 구매도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민간 구매와 동일하게 분류한다.
- (3)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수요 확인은 조달과 무관하다.
- (4) 공공목적에 필요한 물품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달 과정으로 볼 수 있다.

2. 학교가 실험실을 개선한다. 교육과정에 필요한 실험기능을 정하는 역할과 입찰·계약을 집행하는 역할을
구별한 것은?

- (1) 국회 입법 기능과 법원 재판 기능
- (2) 대금 수령 기능과 제조 기능
- (3) 계약상대자 기능과 외부 감사 기능
- (4) 사업 담당 기능과 계약 담당 기능

3. 공공조달과 민간구매의 복잡성 비교로 교재 설명에 맞는 것은?

- (1) 공공조달은 예산 검토가 없어 민간구매보다 단순하다.
- (2) 대규모 첨단산업의 민간구매도 자금·기술 검토가 복잡할 수 있다.
- (3) 구매가 복잡하면 자동으로 공공조달이 된다.
- (4) 민간구매는 금액과 기술 수준에 관계없이 단순하다.

4. 차별금지와 평등대우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 (1) 입찰가격이 낮으면 공개한 참가자격을 충족하지 않아도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
- (2) 기존 거래업체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평등대우에 부합한다.
- (3) 동일한 상황의 참가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당한 자격요건은 검토할 수 있다.
- (4) 평등대우를 위해 계약이행 능력에 관한 심사를 모두 없애야 한다.

5. 새 전자조달시스템을 도입했지만 담당자들이 요구사항 분석과 시장조사를 수행하지 못한다. 역량 강화 관점에서 적절한 보완은?

- (1) 업무역량 진단을 바탕으로 교육과 전문인력 지원을 결합한다.
- (2) 장비를 추가 구입하면 전문적 판단능력도 자동으로 확보된다.
- (3) 판단이 필요한 업무를 없애고 모든 조달을 동일 방식으로 처리한다.
- (4) 교육 여부 대신 로그인 횟수만으로 전문성을 판정한다.

6. 일반경쟁에 적법하게 참여한 업체에 보장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 규격 미달 제안의 자동 통과
- (2) 차기 입찰에서의 우선 낙찰권
- (3) 공개된 기준에 따라 경쟁할 기회
- (4) 최저가격 여부와 관계없는 계약체결 권리

7. 지명한 업체 세 곳 중 한 곳에만 더 완화된 납품조건을 제시하였다. 지명 이후 절차에 관한 적절한 판단은?

- (1) 지명된 업체에도 공통된 조건과 공정한 평가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 (2) 지명 과정에서 검토했으므로 업체별로 다른 낙찰기준을 적용해도 된다.
- (3) 지명된 업체는 조건 차이에 관계없이 모두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본다.
- (4) 지명경쟁에서는 입찰조건 자체가 필요 없다.

8. ㉠ 대체 가능한 공급자가 여럿이지만 특정 업체를 선택한다. ㉡ 필요한 대상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하나뿐이다. 교재의 개념 구별로 적절한 것은?

- (1) ㉠ 단독공급원 상황, ㉡ 단일공급원 선택
- (2) ㉠ 일반경쟁의 완료, ㉡ 지명경쟁의 완료
- (3) ㉠ 수요가 없는 상황, ㉡ 구매예산이 없는 상황
- (4) ㉠ 단일공급원 선택, ㉡ 단독공급원 상황

9. 소액 표준품을 자주 구매하며 공급자가 많고 제품 요구도 단순하다. 이 환경에서 우선 강화할 전자조달 기능은?

- (1) 매 주문마다 새 연구개발 협상절차를 만드는 기능
- (2) 공급자를 한 업체로 고정하고 대안 검색을 막는 기능
- (3) 전자카탈로그·주문·지불의 간편한 업무흐름
- (4) 모든 가격정보를 별도 종이대장으로만 관리하는 기능

10. 요구 성능은 동등한 등록상품 A와 B가 있다. A는 납기가 사용 예정일 이후이고 B는 사용 예정일 이전에 공급할 수 있다. 가격만 비교하기 전에 확인할 핵심은?

- (1) 해당 상품의 납품조건이 필요한 사용시점에 맞는지 여부
- (2) 양 업체의 전체 연간 매출액만의 크기
- (3) 공급업체가 최근 받은 평가의 평균점수만
- (4) 동일상품의 과거 최저 등록가격만

11. 수요기관별로 필요한 클라우드 사용기간·용량·지원조건이 다르다.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의 취지에 맞는 접근은?

- (1) 어떤 기관이든 같은 용량을 같은 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고정한다.
- (2) 카탈로그가 있으면 보안·지원조건은 검토하지 않는다.
- (3) 사용량이 달라도 계약 내용에 기록하지 않는다.
- (4) 카탈로그를 바탕으로 제안 평가와 협상을 통해 필요한 공급조건을 구체화한다.

12. 하나의 품목이 서로 다른 두 품명에 중복 분류되지 않도록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려 한다. 가장 관련된 목록화 원칙은?

- (1) 상호배제성
- (2) 단위가격의 동일성
- (3) 거래금액의 최소성
- (4) 제조업체의 지역성

13. 같은 종류의 장비에 제조사·모델이 다른 두 제품이 있다. 목록정보를 관리할 때 분류와 개별 품목 식별을 구별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1) 개별 품목을 구별하려면 물품의 분류체계 자체를 없애야 한다.
- (2) 분류정보는 제품의 종류를 묶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3) 같은 분류이면 실제 규격과 제조사가 달라도 하나의 동일 품목이다.
- (4) 같은 분류에 속하더라도 서로 다른 제조사·모델의 품목을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

14. 학습용 실적표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액은 8억 원, 실제 구매액은 6억 원이다. 해당 표는 달성률을 실제 구매액÷계획액으로 정한다. 올바른 기록은?

금액·달성률 산식은 학습용이며 법정 실적 산정 예외는 다루지 않습니다.

- (1) 구매실적 8억 원, 달성률 100%이다.
- (2) 구매실적 6억 원, 계획 대비 달성률 75%이다.
- (3) 구매실적 14억 원, 달성률 175%이다.
- (4) 구매실적 6억 원, 달성률 약 133.3%이다.

15. 업체가 중소기업확인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판매하는 모든 품목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라고 소개한다. 제도 적용을 분류할 때 바로잡아야 할 점은?

- (1) 제조업 중소기업은 제품 지정 확인 없이 경쟁제품 실적을 신고할 수 있다.
- (2) 중소기업이 취급하면 제품 지정 없이 모두 경쟁제품이 된다.
- (3) 경쟁제품 지정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수요기관이 업체별로 부여한다.
- (4) 기업이 중소기업인지와 해당 제품이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한다.

16. 동일 성능의 친환경 장비는 일반 장비보다 최초 구입비가 360만 원 높고, 매년 운영비가 90만 원 적다. 다른 비용·잔존가치 차이는 없고 할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누적 운영비 절감액이 추가 구입비와 같아지는 시점은?

학습용 가상 수치입니다. 운영비 절감은 매년 말 동일하게 발생하고 할인율·세금·고장·교체 차이는 없습니다.

- (1) 4년 말
- (2) 3년 말
- (3) 5년 말
- (4) 2년 말

17. 공공조달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시범구매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아직 참여기관의 구매수요나 계약수량은 정해지지 않았다. 선정 사실의 의미는?

- (1) 선정 제품은 현장 납품·검사 없이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 (2) 선정된 날 모든 참여기관에 동일 수량의 납품채무가 발생한다.
- (3) 시범구매 지원 대상이 된 것이며, 실제 공급 수량·대가는 수요와 후속 계약을 통해 정해진다.
- (4) 선정은 은행이 제품 구매대금을 대출하기로 확정된 결정이다.

18. 기관의 제안은 “야간 취약구역의 안전을 개선하고 싶다”는 아이디어 단계이다. 이용환경·검증목표·실증 장소가 정해지지 않아 바로 제품공모하기 어렵다. 교재의 공공수요 숙성지원에 가까운 활동은?

- (1) 아이디어를 접수하면 성능 검증 없이 성공제품으로 지정한다.
- (2) 현장 문제와 이용조건을 분석하여 실증·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과제로 발전시킨다.
- (3) 기관의 문제는 남겨 둔 채 최저가격 목록만 작성한다.
- (4) 특정 업체 제품을 먼저 확인한 뒤 그 사양을 아이디어에 덧붙인다.

19. 업체는 여성 근로자가 많다는 직원현황표만 제출했고 여성기업확인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여성기업 제품 구매로 분류할 때 적절한 처리는?

- (1) 물품 사용자가 여성인 경우에만 여성기업확인서를 확인한다.
- (2) 구매담당자가 여성이라면 해당 구매를 여성기업 구매로 분류한다.
- (3) 직원 구성만으로 분류하지 않고 여성기업확인 등 해당 기업 자격을 확인한다.
- (4) 여성 근로자가 절반 이상이면 확인자료 없이 분류한다.

20. 서로 같은 장비·수량·가격으로 계약하려는 A와 B가 동일 내용의 청약을 교차 발송했다. A의 청약은 B에게 오전 10시에, B의 청약은 A에게 오후 2시에 도달했다. 민법 제533조만 적용할 때 계약 성립 시점은?

사인 간 일반 거래로 동일 내용의 청약이며, 특별한 형식요건이나 별도 약정은 없습니다.

- (1) 어느 한쪽이 별도로 승낙서를 발송한 때
- (2) 오후 2시
- (3) 먼저 청약을 발송한 때
- (4) 오전 10시

21. 민법상 일반적인 해제와 해지의 효과를 비교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특별한 예외나 별도 합의는 없다.

민법의 일반 규정에 관한 비교이며 공공계약의 개별 해제·해지 사유나 정산 특약은 다루지 않습니다.

- (1) 해지는 계약 체결 전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모든 과거 이행을 소멸시킨다.
- (2) 해제된 계약에서 받은 급부는 원상회복과 관계없다.
- (3) 해제는 원상회복 문제를 발생시키고, 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 구별한다.
- (4) 해제와 해지는 표기만 다르므로 원상회복 검토도 항상 같다.

22. 추가 대금 1,000만 원을 주장하는 A와 채무가 없다고 다투는 B가 서로 양보하여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해당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했다. 민법상 화해의 핵심 구조는?

유효한 사인 간 화해계약의 성립을 묻는 가상 사례입니다. 재판상 화해조서나 집행력은 다루지 않습니다.

- (1) A가 일방적으로 요구액을 적은 문서를 B에게 보낸 것만으로 성립하는 것
- (2) B가 400만 원을 빌려주는 새로운 소비대차만 성립하는 것
- (3)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종결하기로 약정하는 것
- (4) 법원이 반드시 원래 채권액을 판결한 후에만 합의가 가능한 것

23. 일반경쟁이 국가계약의 원칙이라는 이유로, 담당자가 다른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 구매제도의 검토를 생략했다. 법령 적용의 관점에서 적절한 것은?

- (1) 일반경쟁 원칙은 다른 법률에 규정된 구매의무보다 항상 우선한다.
- (2) 일반 원칙과 함께 해당 구매에 적용되는 다른 법률의 특례·의무를 확인한다.
- (3) 적용 가능한 특례가 하나라도 있으면 가격과 이행능력의 검토를 모두 생략한다.
- (4) 정책 목적이 제시되면 구매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경쟁을 제외할 수 있다.

24. 동일한 국가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납품 지체상금과 기관의 대가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가 각각 적법하게 산정되었다. 교재에 인용된 규정에 따른 처리로 적절한 것은?

동일한 계약에서 발생한 지체상금과 지급 지연이자를 전제로 한다.

- (1) 기관에 지급 지연이자가 생기면 이전에 발생한 납품 지체 사실이 자동 소멸한다.
- (2)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이 있으면 기관의 지급 지연이자는 산정할 필요가 없다.
- (3) 서로 다른 발생 원인을 확인한 뒤 규정에 따라 지급 지연이자와 지체상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 (4) 두 금액은 명칭이 다르므로 법이 허용해도 상계할 수 없다.

25. 불공정조달행위 조사자가 현장 자료를 확인하려 한다. 적절한 조사 운영은?

- (1) 조사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고 조사 목적에 필요한 범위의 자료를 확인한다.
- (2) 계약과 무관한 가족의 개인자료도 향후 필요할 수 있으므로 모두 확보한다.
- (3) 조사받는 업체가 문의하면 조사 결과가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 (4) 조사 목적이 공익이므로 신분 확인이나 자료 범위의 제한은 없다.

26. 기관 자체 전자입찰시스템의 화면과 첨부문 내용이 다르다. 담당자가 나라장터에서 본 우선순위 규정을 곧바로 적용하려 한다. 적절한 검토는?

- (1) 자체 시스템에서는 법령상 공고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 (2) 전자 화면과 첨부문이 다르면 입찰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자유롭게 고른다.
- (3) 해당 자체 시스템에 적용되는 법령·이용약관·공고조건을 먼저 확인하여 판단한다.
- (4) 모든 자체 시스템은 나라장터와 기술적으로 같으므로 규정도 항상 동일하다.

27. 공기업·준정부기관 수의계약 규칙의 여러 호에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일정한 자회사 관련 계약 등이 따로 열거되어 있다. 조문을 읽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 (1) 자회사 관련 사유가 한 호에 있으면 다른 모든 호에도 자회사 요건을 덧붙인다.
- (2) 각 호의 독립된 사유와 그 호 안의 요건을 구분하여 해당 계약에 적용한다.
- (3) 열거된 사유는 예시에 불과하므로 기관장이 원하는 사유를 자유롭게 추가한다.
- (4) 한 호를 충족하면 그 밖의 계약절차 규정도 모두 면제된다.

28. 학습용 계약은 귀속 사유가 성립하면 전체 보증금에서 별도로 검사·인수한 가분적 부분의 비율을 공제하도록 정했다. 전체 보증금 1천8백만 원, 그 부분의 비율 40%라면 주어진 조건상 귀속 대상액은?

가상 계약의 산정식만 적용한다. 비율은 법정 보증금률을 뜻하지 않는다.

- (1) 1천8백만 원
- (2) 7백20만 원
- (3) 4백50만 원
- (4) 1천80만 원

29. 기관 사정에 따른 적법한 계약 종료 정산에서 완료부분 대가와 철수에 필요한 합리적 비용을 별도로 검토하도록 정했다. 정산표의 적절한 구성은?

문제에 제시된 정산 항목의 구별을 묻는다. 구체적 손해배상 범위의 확정도 별도 검토 사항이다.

- (1) 철수 비용은 물품 자체가 아니므로 약정이 있어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
- (2) 철수 비용을 청구하면 인수 완료부분의 대가도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본다.
- (3) 인수할 완료부분과 필요한 철수 비용을 근거자료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 (4) 기관 사정으로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미수행분 이익까지 증빙 없이 지급한다.

30. 불공정조달 조사에서 위반이 확인되었다. 결과보고서에 거래정지·계약종료·입찰참가자격 제한·환수를 모두 같은 조치로 묶어 자동 부과한다고 적었다. 적절한 수정은?

- (1) 위반 하나가 있으면 나열한 모든 조치의 요건도 동시에 충족된다.
- (2) 조치별 법적 성격·성립요건·처리권한과 적용 범위를 나누어 검토한다.
- (3) 행정제재를 검토하면 금전 반환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검토할 수 없다.
- (4) 조사담당자가 사실을 확인하면 계약부서 등 다른 권한 주체의 판단은 필요 없다.

공공조달계획 수립 및 분석

31. 가상의 평가에서 방수등급 충족은 필수조건이고 디자인은 가점항목이다. 제안 장비는 방수조건에 미달하지만 디자인이 우수하다. 판단으로 적절한 것은?

문제에 명시한 가상의 조건·수치만 계산 전제로 사용합니다. 실제 환율·법정 수수료·평가배점·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 (1) 가점 총점이 높으면 필수조건은 충족한 것으로 본다.
- (2) 디자인이 우수하면 방수시험 결과가 자동 변경된다.
- (3) 가점항목이 있으면 필수조건 확인은 평가 후로 미룬다.
- (4) 디자인 가점으로 필수조건 미달을 대신할 수 없다.

32. 증빙 발급에 7일, 제안서 최종 편집에 2일이 필요하고 편집은 증빙 수령 후에만 가능하다. 마감까지 8일인 가상의 계획에서 우선 조치로 적절한 것은?

문제에 명시한 가상의 조건·수치만 계산 전제로 사용합니다. 실제 환율·법정 수수료·평가배점·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 (1) 편집 2일만 남기고 증빙은 제출 후 보완한다고 가정한다.
- (2) 총 9일을 8일 일정표에 그대로 기입하면 해결된다.
- (3) 두 업무가 독립이라고 보고 7일만 계산한다.
- (4) 증빙 발급 단축 가능성이나 참가 실현 가능성을 즉시 재검토한다.

33. 내부 검토자료에 '요건 충족'이라고만 적혀 있고 어느 공고·문서의 조항인지 없다. 보완 방법은?

- (1) 구두 확인 사실만 계속 전달한다.
- (2) 근거 문서명·버전·위치와 검토결과를 연결해 기록한다.
- (3) 검토자 직급이 높으면 근거를 생략한다.
- (4) 모든 근거 문서를 하나의 이미지로 축소해 식별할 수 없게 한다.

34. 조립 설비와 인력은 충분하지만 핵심 수입부품의 확정 공급량이 부족하다. 종합 공급역량 평가로 적절한 것은?

- (1) 내부 생산능력과 외부 공급망의 확보 수준을 함께 평가한다.
- (2) 수입부품 부족은 계약 후에만 검토할 수 있다.
- (3) 장비 수량만 세어 납품 가능 물량을 확정한다.
- (4) 조립 능력이 있으면 원부자재는 확보된 것으로 본다.

35. 교재가 설명하는 제조원가의 기본 구성으로 적절한 것은?

- (1)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위약금
- (2) 재료비·이윤·부가가치세
- (3) 사업예산·예정가격·낙찰가격
- (4) 재료비·노무비·경비

36. 고비용·고공급위험의 맞춤 설비를 단기 최저단가만 보고 공급자를 계속 바꾸려 한다. 적절한 검토는?

- (1) 장기 협력은 성과를 측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 (2) 전환 위험·공급 연속성·장기 협력의 가치까지 비교한다.
- (3) 고가 설비일수록 인수인계 비용은 항상 없다.
- (4) 현재 공급자가 있으면 어떤 조건도 검토하지 않는다.

37. 기관이 구매사양을 정하기 전에 시장 기술과 공급업체 역량을 알아보려고 RFI를 보냈다. 이 요청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1) 반드시 최종 확정가격만 한 줄 제출해야 한다고 이해한다.
- (2) 응답 즉시 낙찰자가 확정되는 계약서로 이해한다.
- (3) 이미 납품한 물품의 검사조서로 이해한다.
- (4) 후속 조달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로 이해한다.

38. '무상 유지관리 2년'이 과업에 포함되어 있다. 업체가 무상이라는 이유로 인력·출장·부품비를 원가에서 뺐다. 적절한 판단은?

- (1) 별도 대가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이어도 수행비용은 분석해야 한다.
- (2) 무상 문구가 있으면 수행 자원도 소요되지 않는다.
- (3) 무상 과업은 의무가 없으므로 삭제하고 견적한다.
- (4) 유지관리비는 계약 이행과 관련 없는 비용이다.

39. 사전규격공개 단계에서 검토한 파일로 제안서를 작성했으나 정식 입찰공고에서 납품범위가 바뀌었다. 필요한 조치는?

- (1) 정식 공고의 변경 내용을 확인해 제안서·가격·일정을 다시 맞춘다.
- (2) 사전규격 의견을 제출한 업체는 변경 조건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 (3) 이전에 검토했으므로 정식 공고는 읽지 않는다.
- (4) 사전규격 파일이 항상 정식 공고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40. 발주기관이 특정 제조사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맺고 낙찰자에게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구매이다. 공고에는 제조사 이름만 있고 협약 내용과 협약금액이 빠져 있다. 업체들이 견적을 산정하기 전에 요청할 보완으로 적절한 것은?

특정 제조사 협약이 적법하게 필요한 해당 구매 사례의 정보공개 문제이다. 모든 구매에 이런 협약을 요구한다는 뜻은 아니다.

- (1) 입찰자가 공급·기술지원 조건과 비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협약 내용과 금액을 공고에 명확히 제시하도록 요청한다.
- (2) 낙찰될 업체 한 곳에만 협약금액을 미리 알린다.
- (3) 협약금액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그 비용을 0원으로 가정한다.
- (4) 제조사 상호가 공개되었으므로 공급조건과 지원비는 확인하지 않는다.

41. 가상 서면입찰은 기술평가 전에 가격이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서와 가격서를 별도 봉투로 제출하도록 정했다. 기술서 첫 장에 총입찰가격을 크게 적었다. 수정할 것은?

가상 공고가 기술서 내 가격 노출 금지를 명시한 사례입니다.

- (1) 두 봉투의 색을 같게 하면 가격노출 문제가 해결된다.
- (2) 총액뿐 아니라 가격 산출표도 기술서 표지에 추가한다.
- (3) 정해진 분리제출 방식에 맞게 가격정보를 기술서에서 분리한다.
- (4) 가격봉투를 생략하고 기술서에만 가격을 쓴다.

4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입찰서에는 1억 원, 함께 낸 산출내역서 합계에는 9천만 원을 기재했다.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호의 직접적인 검토는?

시행령 제14조제6항 적용 입찰이라는 요건을 명시한 사례이다.

- (1) 입찰서 금액이 산출내역서보다 크면 이 조항의 적용에서 언제나 제외된다.
- (2) 이 유형에서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 (3) 산출내역서 파일을 첨부했으므로 금액 일치 여부는 무관하다.
- (4)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을 기관이 자동으로 입찰가격으로 정하면 된다.

43. 기관이 유찰 후 동일조건 재입찰을 실시하면서 새 제출시간을 공지했다. 공지는 재입찰 참여자가 새로 투찰하도록 정한다. 첫 입찰 참가업체가 할 일은?

새 투찰을 요구하는 재입찰 공지를 적용합니다.

- (1) 재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새로 정한 시간·방식에 맞춰 다시 투찰한다.
- (2) 첫 입찰의 접수번호를 계약번호로 사용해 납품한다.
- (3) 첫 입찰서가 자동 이월된다고 생각하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다.
- (4) 이미 참가했던 업체는 재입찰에 다시 참가할 수 없다.

44. 제안평가위원회가 기술점수를 평가하는 업무와 계약심의 조직이 절차·선정안을 검토하는 업무를 혼동하고 있다. 역할을 구분한 것은?

- (1) 이름에 위원회가 들어가면 구성·권한·업무가 모두 동일하다.
- (2) 기술제안의 전문적 평가와 계약 의사결정의 절차·승인 검토는 목적과 권한이 다를 수 있다.
- (3) 계약심의가 있으면 기술제안 점수 산정은 필요 없다.
- (4) 제안평가위원 한 명이 모든 계약 승인권한을 자동 취득한다.

45. 평가 도중 위원이 한 제안업체와 자신의 이해관계가 적용 규정상 회피사유에 해당함을 뒤늦게 알았다. 위촉 당시 몰랐다는 이유로 계속 채점하려 한다. 적절한 행동은?

- (1) 해당 업체 점수만 조용히 낮추면 회피를 대신할 수 있다.
- (2) 본인의 점수표를 없애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처리한다.
- (3) 위촉이 끝났으므로 새로 확인된 이해관계는 무시한다.
- (4) 즉시 알리고 참여 중지·회피 및 이미 한 평가의 처리에 관한 규정상 조치를 받는다.

46. 가상 공고는 기술점수 70점 이상만 협상적격자로 하고, 적격자 중 기술·가격 합계 순으로 협상한다고 정했다. A는 기술 69·가격 20점, B는 기술 72·가격 15점, C는 기술 71·가격 17점이다. 첫 협상대상은?

지문에 제시된 가상 공고만 적용하며 다른 가점·동점·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 (1) C
- (2) A와 C의 공동 1순위
- (3) A
- (4) B

47. 가상 적격심사 공고는 적격한 입찰자 중 낮은 입찰가격 순으로 심사하여 기준점수 이상인 자를 선정한다고 정했다. 가격순 A·B·C의 심사점수가 각각 88·94·96점이고 통과기준은 92점이다. 선정 대상은?

모든 입찰의 가격·형식 등 선행 적격요건은 충족했습니다. 점수와 기준은 가상 값입니다.

- (1) 세 업체의 공동 선정
- (2) A
- (3) C
- (4) B

48. 희망수량 구매에서 A의 단가는 현장 인도·포장비를 포함하고 B는 공장 출고만 포함한다. 이를 같은 조건의 단가로 바로 정렬하려 한다. 먼저 해야 할 검토는?

- (1) 공고된 인도·부대비용 조건을 충족하는 동일 기준의 단가인지 확인한다.
- (2) 수량을 적게 제시한 업체의 조건만 기준으로 삼는다.
- (3) 숫자가 작으면 인도장소가 달라도 무조건 우선한다.
- (4) B의 단가에 아무 운송비나 임의로 더해 확정한다.

49. 평가 설계 연습에서 A는 기술 90·가격 70점, B는 기술 80·가격 90점이다. 시나리오Ⅰ은 기술 60%·가격 40%, Ⅱ는 기술 80%·가격 20%로 합산한다. 각 점수는 100점 척도이며 높은 합계가 우선이다. 두 시나리오의 순위를 올바르게 비교한 것은?

공고 전 설계 연습의 가상 가중치이다. 실제 법정 배점이나 개찰 후 변경 권한을 제시하지 않는다.

- (1) 두 시나리오 모두 B가 같은 차이로 앞선다.
- (2) Ⅰ에서는 B가 2점 높고, Ⅱ에서는 A가 4점 높아 순위가 역전된다.
- (3) 가중치는 합계가 100%이므로 순위에 영향을 줄 수 없다.
- (4) 두 시나리오 모두 A가 같은 차이로 앞선다.

50. 탈락한 업체가 이의 제기 여부를 검토한다. 공개된 평가항목 중 자사 실적이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 먼저 마련할 자료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본 문항은 증거 정리 방법을 묻습니다. 교재의 국내 이의신청 제도에 관한 포괄적 문장을 법적 근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1) 낙찰업체의 평판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글 모음
- (2) 자사의 모든 기술정보를 삭제한 뒤 새로 작성한 제안서
- (3) 공고된 평가기준, 실제 제출한 실적 증빙, 공개된 평가결과의 대조표
- (4) 결과가 불리하다는 사실만 적은 항의문

공공계약관리

51. 착수회의에서 성능검사 방법을 구체화하려 한다. 계약은 “동시 사용자 200명에서 평균 응답시간 2초 이내”를 요구한다. 회의 결과로 가장 적절한 보안은?

성능 수치는 가상 계약조건이며 국가가 모든 시스템에 요구하는 법정 성능 기준이 아닙니다.

- (1) 시험방법은 납품 후 불합격 결과를 본 다음 공급자가 선택하게 한다.
- (2) 담당자가 빠르다고 느끼면 정량 측정을 대신하도록 한다.
- (3) 계약상 성능수준을 유지하면서 시험 부하·측정구간·기록방법을 합의해 둔다.
- (4) 시험이 편하도록 사용자 수를 50명으로 줄이고 같은 성능검사로 처리한다.

52. 계약 검토표에 “모든 하도급은 계약 종류와 관계없이 사전승인만 받으면 된다”고 적혀 있다. 교재의 계약종류별 하도급 관리 설명에 맞는 수정은?

- (1) 승인을 받으면 법령상 금지된 하도급도 항상 허용된다고 적는다.
- (2) 적용 법령·계약조건에 따라 허용 범위와 승인·통보 등 필요한 절차를 구분한다.
- (3) 통보라는 명칭이 있는 계약은 자격·대금 조건도 모두 확인하지 않는다고 적는다.
- (4) 공공계약이면 하도급 절차가 같으므로 문구를 유지한다.

53. 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증액과 이행기간 연장에 합의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려 한다. 기존 이행보증서는 당초 금액·만료일만 담고 있다. 실행 단계에서 확인할 것은?

- (1) 변경계약서만 체결하면 보증서 기재도 자동으로 동일하게 바뀐 것으로 본다.
- (2) 기존 보증서는 이미 제출했으므로 만료 여부는 계약종결 때만 본다.
- (3) 증액분만 입금받으면 기간 연장에 관한 문서는 생략한다.
- (4) 변경계약과 보증금액·보증기간·산출내역 등 관련 자료의 일치 여부

54. 운송기록에는 장비가 기관 정문에 도착했다고 표시되지만, 수령 담당자에게 반입 통지가 없고 인도 장소도 계약상 지정 창고와 다르다. 인계 기록을 완료 처리하기 전 확인할 사항은?

- (1) 운송차량의 기관 근처 도착 기록만으로 검수까지 완료한다.
- (2) 운송기사가 인근 장소에 두었다고 하면 기관 수령자 확인을 생략한다.
- (3) 기관 정문 도착으로 모든 하자보수 의무도 종료된다.
- (4) 지정 장소 반입과 적정 수령 절차를 확인하고 실제 인계 사실을 기록한다.

55. 가상의 서비스수준협약은 가용률을 (측정시간-장애시간)÷측정시간×100으로 계산하고 99.0% 이상을 목표로 정했다. 측정시간 1,000시간 중 장애시간이 8시간이면 평가 결과는?

장애시간 제외 예외는 없고, 측정시간과 목표·산식은 본 문항의 가정입니다.

- (1) 99.2%로 제시된 목표를 충족한다.
- (2) 92.0%로 목표를 충족하지 못한다.
- (3) 99.0%로 측정값과 무관하게 목표값으로 기록한다.
- (4) 0.8%로 목표를 충족하지 못한다.

56. 업체가 검사 면제 가능성을 인정하는 지정서를 제시했다. 면제 대상 품목·기간·예외 여부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 기관의 검토로 적절한 것은?

- (1) 면제 가능 제도가 존재하면 인도·수량 등 모든 이행기록을 삭제한다.
- (2) 실제 계약물품에 적용되는 면제 요건·범위를 확인하고 면제와 품질 의무 면제를 구별한다.
- (3) 검사 면제가 가능하면 계약규격 미달 납품도 허용된다.
- (4) 업체가 지정서 하나를 보유하면 모든 제품에 영구 면제를 적용한다.

57. 계약금액 2,000만 원 중 이미 기성대가 1,200만 원이 지급됐다. 종결 때 정산할 미정산 선금 잔액은 200만 원이며, 다른 공제·유보·추가지급은 없다. 해당 잔액을 최종 지급액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 이번 지급액은?

모든 금액과 공제조건은 가정입니다. 선금 잔액 200만 원은 앞선 지급 후 남은 금액이며 중복 공제하지 않습니다.

- (1) 600만 원
- (2) 1,800만 원
- (3) 1,000만 원
- (4) 800만 원

58. 한 계약으로 납품한 장비 X와 Y의 특기사항에 하자보증기간이 각각 12개월과 24개월로 명시되어 있다. 기관은 관리 편의를 위해 모두 X의 12개월로 기록하려 한다. 적절한 관리는?

12개월·24개월은 가상 약정이며 법정 공종별 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 (1) 각 품목에 약정된 기간과 해당 자산점을 개별 기록한다.
- (2) 납품 수량이 많은 품목의 기간이 다른 품목에도 자동 적용된다.
- (3) 같은 계약번호이면 짧은 기간 하나로 통일한다.
- (4) 계약번호가 같으므로 보증기간을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59. 유효한 적용규정에 따라 보증금의 실제 납부는 면제되지만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이다. 이 구조의 적절한 이해는?

실제 납부 면제와 사유 발생 시 지급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된 사례입니다.

- (1) 현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사유 발생 여부를 조사할 필요도 없다.
- (2) 사전 납부가 면제되면 확약서에 적은 지급 의무도 무효가 된다.
- (3) 면제받은 업체는 어떤 불이행을 해도 계약 책임이 없다.
- (4) 사전 납부를 면제받은 것과 귀속사유 발생 시 지급 의무가 없는 것은 다르다.

60. 가상 약정은 각 지체일의 미인수 금액에 일률 0.001을 적용한다. 총액 1,000만 원 계약에서 첫 2일은 미인수 금액 1,000만 원, 다음 3일은 적법한 가분부분 인수로 미인수 금액 600만 원이다. 제외일은 없다. 지체상금은?

중간 인수의 공제 적격성과 적용 시점이 확정되어 있으며 일률은 가상 값입니다.

- (1) 3만 8천 원이다.
- (2) 8만 원이다.
- (3) 5만 원이다.
- (4) 3만 원이다.

61. 입찰명세는 “100개”를 요구하지만 가격입력란은 단위 “상자”로 되어 있고 한 상자당 개수는 정하지 않았다. 업체마다 서로 다른 포장단위를 사용한다. 공고 전 보완해야 할 핵심은?

특정 포장단위를 강제하는 별도 법령은 없고, 지문상 단위가 미확정인 상황입니다.

- (1) 개찰 후 유리한 업체의 포장단위를 전체 참가자에게 소급 적용한다.
- (2) 최저 숫자를 입력한 업체를 선정하면 단위 차이는 해결된다.
- (3) 상자 크기는 업체 자율이므로 계약수량도 업체마다 달라도 된다.
- (4) 계약수량·포장단위·가격입력 단위를 일치시키거나 환산관계를 명확히 한다.

62. 물품 적격심사 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했다. 계약담당자가 진위 확인이 필요한 실적증명서의 원본을 적법하게 별도 요청하자, 업체는 전자 제출이므로 어떤 원본 확인에도 응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교재 설명에 따른 판단은?

- (1) 다른 업체의 증명서 원본을 대신 제출해도 제출 횟수만 맞으면 된다.
- (2) 전자 제출은 증빙의 진위 확인을 모두 면제한다.
- (3) 원본 확인 요청이 있으면 기존 전자 신청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 (4) 전자 제출과 별개로 원본 확인이 필요한 자료에 대한 적법한 요청에는 대응한다.

63. 교재는 국내 공급 물품에 적용하는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도 조건을 DTE라고 소개하면서 인코텀즈 2020의 조건과 구별한다. 이에 따른 적절한 판단은?

- (1) DTE는 인코텀즈 2020에 있는 모든 거래에 공통된 표준조건이다.
- (2) DTE와 DDP는 마지막 글자만 다르고 비용 부담이 언제나 완전히 같다.
- (3) DTE의 의미와 부담 범위는 해당 조달 계약조건으로 확인하고 인코텀즈의 표준 약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4) 약어가 세 글자이면 별도 계약내용을 읽지 않아도 동일한 위험 이전 규칙이다.

64. 업체는 자체 제조공정표를 제시했으나 해당 기간 생산 인력·원자재 매입·전력 사용 자료와 납품량이 서로 맞지 않는다. 직접생산 점검에서 적절한 접근은?

- (1) 공정표 양식이 완성되어 있으면 실제 활동 기록은 보지 않는다.
- (2) 공정표와 실제 생산을 뒷받침하는 현장·인력·원재료·사용 실적을 교차 확인한다.
- (3) 전력 사용량 하나만으로 예외 없이 직접생산 위반을 확정한다.
- (4) 업체의 매출 총액이 크면 해당 납품분의 생산기록을 대체한다.

65. 계약 변경합의는 “10월 1일 이후 발주분부터 새 규격·단가를 적용하고 이전 발주분은 기존 조건을 유지한다”고 정했다. 9월 발주분이 10월에 납품되었다. 적용 판단은?

제시한 시점별 적용 약정이 유효하고 별도 소급 변경 합의는 없습니다.

- (1) 변경합의가 있으면 과거의 모든 발주분도 소급 변경된다.
- (2) 합의가 기준으로 정한 발주일을 확인하여 해당 9월 발주분에는 기존 조건을 적용한다.
- (3) 납품일이 10월이면 합의 문구와 무관하게 새 단가를 적용한다.
- (4) 청구서 작성일을 업체가 선택하면 적용 단가도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

66. 건축설계용역에서 설계공모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려 한다. 교재가 설명하는 설계공모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설계공모의 적용금액·대상 예외는 이 문항에서 다루지 않는다.

- (1) 제출된 공모안의 우열을 심사하여 우수한 설계 작품의 당선작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 (2) 설계공모는 작품 내용을 열람하지 않고 가장 낮은 설계비만 고르는 방식이다.
- (3) 설계공모에 응모한 모든 업체는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설계계약을 체결한다.
- (4) 설계공모는 사업수행능력 사전심사를 통과한 순서대로 당선작을 정한다.

67. 경쟁적 대화에서 A사가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독자 기술해법을 제시했다. 기관이 최종 공통 요구를 정할 때 적절한 조치는?

- (1) 모든 참여자에게 똑같이 보내면 비공개 해법도 공개해도 된다.
- (2) 비공개 합의가 있으면 대화 결과의 어떤 공통 요구도 정할 수 없다.
- (3) 기관 목표와 무관하더라도 A사의 상세 해법을 다른 업체 제안의 필수 문구로 복사한다.
- (4) 공통으로 확정할 요구와 비공개 합의한 특정 업체의 해법을 구분하여 누설을 막는다.

68. 공식 공고가 “제안서 제출을 완료해야 가격입찰서를 낼 수 있다”고 정했다. 적절한 작업 순서는?

- (1) 제안서만 제출하고 가격입찰은 생략
- (2) 가격을 발표자료에 쓰면 제출이 모두 완료
- (3) 가격입찰서 제출 → 제안서 임시저장만 수행
- (4) 제안서 제출 완료 → 가격입찰서 제출

69. 여러 지점의 물품을 같은 공급자에게 주문했다. 정산표에는 총수량만 있고 어느 납품요구가 어느 지점에 이행됐는지 연결되어 있지 않다. 보완할 기록은?

- (1) 납품요구 번호별 수량·수량기관·검사 결과와 지급 기록의 연결이다.
- (2) 검사 후에는 최초 납품요구 번호를 모두 지우는 것이 원칙이다.
- (3) 총수량만 맞으면 미납 지점이 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없다.
- (4) 공급자가 같으면 지점별 납품요구를 서로 바꾸어 표시해도 차이가 없다.

70. MAS 가격협상 검토를 위한 가상 거래자료에서 동일 규격을 20개는 개당 10만 원, 80개는 개당 8만 원에 판매했다. 수량 가중평균 거래가격을 구하면?

동일 규격·동일 거래조건의 가상 자료이며 세금·배송·할인 등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 (1) 10만 원
- (2) 8.4만 원
- (3) 9만 원
- (4) 8만 원

71. MAS 참여를 검토하는 업체의 제품 가격은 낮지만, 파산 상태 때문에 해당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확인되었다. 적격성평가의 취지를 반영한 판단은?

- (1) 제시 가격이 낮으므로 이행능력에 관한 확인을 생략한다.
- (2) 파산 상태의 업체는 제품명을 변경하면 같은 심사를 통과한다.
- (3) 가격의 저렴함과 별개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결격 사유를 검토한다.
- (4) 제품 광고가 충분하면 재무상태 관련 자료를 대신한다.

72. MAS 계약 전의 적격성·가격협상 기록과 납품 후 계약이행실적 평가를 구분한 것은?

- (1) 한 번 실적평가를 받으면 향후 새로운 계약의 적격성 검토는 모두 면제된다.
- (2) 납품 후 평가도 업체가 제출한 최초 견적서만으로 산정한다.
- (3) 전자는 계약 진입·가격의 검토, 후자는 실제 공급 과정의 납기·품질 등 성과에 관한 평가이다.
- (4) 계약 때 가격이 적정했으면 사후 납기·품질은 평가할 수 없다.

73. 교재가 설명하는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의 기관 구매에서 계약·검수 후 대금 지급 주체를 확인하려 한다. 적절한 접근은?

- (1) 조달청의 플랫폼에 등록되면 모든 대금은 조달청이 무조건 대신 지급한다.
- (2) 서비스 업체가 선정되면 실제 구매기관과 무관하게 대금이 선지급된다.
- (3) 해당 구매 절차의 수요기관 직접 지급 조건을 확인하고 일반 조달청 대지급과 구별한다.
- (4) 수요기관이 직접 지급하면 서비스 검사나 확인은 필요 없다.

74. 교재의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설계도면을 그리는 작업만”이라고 요약했다. 이 요약을 보완할 설명은?

- (1) 건설기술은 공사 입찰가격의 숫자 입력만을 말한다.
- (2) 계획·조사·설계뿐 아니라 품질·안전·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관련 기술업무도 함께 본다.
- (3) 시설이 준공되면 기술적 점검과 유지관리의 필요성도 사라진다.
- (4) 설계 이후의 시공 품질관리는 건설기술과 어떤 관련도 없다.

75. 동일한 규모의 공사라도 발주기관과 계약 적용 법체계가 다를 수 있다. 지방계약 기준을 적용할 사업에 국가계약 기준의 공사 적격심사 배점표를 아무 검토 없이 복사했다. 먼저 바로잡을 사항은?

어떤 기관이 어느 법체계에 해당하는지 자체를 새로 판정하지 않고 지문에서 지방계약 적용을 확정했습니다.

- (1) 가격점수가 더 크게 나오는 표를 사후에 선택한다.
- (2) 발주기관 명칭만 바꾸면 기존 표의 법적 근거도 바뀐다.
- (3)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법체계·세부기준을 확인한 뒤 그에 맞는 평가표를 선택한다.
- (4) 공사금액이 같으면 적용 법체계와 무관하게 모든 배점이 같다.

76. 공동수급체가 구성원 B의 핵심 실적과 인력을 포함하여 PQ를 통과했다. 입찰 전 B가 빠지고 C로 바꾸려 한다. 구성 변경 허용·승계 여부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 적절한 접근은?

- (1) 대표사가 같으면 나머지 구성원 변경은 언제나 심사와 무관하다.
- (2) C의 상호를 B로 문서에 바꾸어 적으면 같은 자격으로 본다.
- (3) 구성 변경이 허용되는지와 기존 PQ 심사의 자격·실적·인력 전제가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 (4) 한 번 PQ를 통과하면 어떤 업체로 바꾸어도 결과가 영구 승계된다.

77. 설계·시공 일괄 계약에서 ㉠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자기 설계 오류의 보완과 ㉡ 발주자가 당초 범위 밖 기능을 새로 요구한 변경이 동시에 발생했다. 금액 조정 검토의 적절한 출발점은?

- (1) 두 변경이 같은 날 발생했으므로 한 사유로 합쳐 책임을 정한다.
- (2) 변경 원인·설계 책임·계약 범위를 구분하여 각 사유의 조정 가능성을 따로 검토한다.
- (3) 일괄 계약이면 발주자가 새 기능을 추가해도 어떤 조정도 불가능하다고 확정한다.
- (4) 일괄 계약이면 모든 원인의 변경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전액 증액한다.

78. 대안입찰자가 공법을 변경한 도면만 제출하고 원안과 대안의 수량·단가 내역 및 대안 채택의 이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교재의 제출자료 설명에 비추어 보완할 것은?

- (1) 대안이라는 제목만 있으면 원안과의 비교자료는 필요 없다.
- (2) 원안·대안의 물량과 단가를 비교할 수 있는 내역 및 대안 채택의 이점을 설명하는 자료이다.
- (3) 원안의 불리한 공종은 삭제한 채 대안 총액만 제시하면 된다.
- (4) 업체의 전체 매출액만 제출하면 대안의 수량·단가를 대신한다.

79. 설계용역 계약의 기본 과업에는 일반 설계도서 작성만 있고 별도의 고도화된 디지털 모델 구축은 제외되어 있다. 기관이 해당 모델을 추가로 요구한다. 대가·과업 검토의 적절한 출발점은?

해당 디지털 모델 구축은 원계약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 가상 사례입니다.

- (1) 산출물의 이름을 기존 도면으로 바꾸면 추가 과업이 아니게 된다.
- (2) 기술용역이면 계약에 없던 모든 종류의 디지털 산출물도 무상 포함이다.
- (3) 기본 과업에 포함되는지와 추가 업무의 범위·소요 자원·대가 처리 조건을 구분한다.
- (4) 추가 요구가 있으면 근거 검토 없이 업체가 원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한다.

80. 가상 직불합의는 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금액만큼 원도급자에게 지급할 같은 기성채무를 줄이기로 유효하게 정했다. 이번 총 기성대가 1억 원 중 기관이 하수급인에게 3천만 원을 직접 지급했다. 다른 공제가 없다면 원도급자에게 남은 지급액은?

직접지급과 동일 기성채무 차감 약정이 유효하고 지급액은 모두 같은 정산 범위에 속합니다.

- (1) 3천만 원
- (2) 7천만 원
- (3) 1억 3천만 원
- (4) 1억 원

답안 기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